

보도시점 : 2024. 12. 25.(수) 11:00 이후(12. 26.(목) 조간) / 배포 : 2024. 12. 24.(화)

다부처·민관 협업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

- 8개 중앙부처 협력 '25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
- 민간 역량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

○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다부처 연계 및 민간협력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사업은 지특회계 우선 지원 가능(지방분권균형발전법 31조)

○ '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에 주거·생활 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모대상)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24년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 22개 지원사업 : 국토부2, 교육부1, 행안부3, 문체부1, 농식품부3, 복지부5, 해수부2, 중기부5

- (민관상생 투자협약)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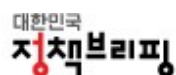
* (공모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목)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	책임자	과 장	장순재	(044-201-3662)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1-3669)
		담당자	사무관	김상조	(044-201-4595)
공동배포 (지역활력타운)	교육부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배정익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변정을	(044-203-6318)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창균	(044-205-350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표광종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이문욱	(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아름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위철승	(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윤철중	(044-202-3459)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570)
		담당자	사무관	심상진	(044-204-7572)



참고 1 '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은퇴자, 청년층, 귀농귀촌인 등 지방 이주 수요 지속 발생
 -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 조성으로 지속적인 지방이전·정착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의 촉매로 활용 필요

- (주요내용)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복합 공간 조성

* (공모대상) 7개 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외)



- (주거) **타운하우스·단독/공동주택**(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등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 주민자치(행안부)·학교시설(교육부)·돌봄(농식품부·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공모를 추진하여 지역활력타운** 선정 지자체에 **22개 연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국토, 교육, 행안, 문체, 농림, 복지, 해양, 중기부가 메뉴판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
(국토부: 지역활력기반지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등)

- 현재까지 **총 17개 지역활력타운**을 선정 완료('23년 7개, '24년 10개)

- (지원사항) 선정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및 인·허가 특례 부여

-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메뉴판 형식의 22개 연계사업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 (인·허가 특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도시·군 관리계획·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등 의제 처리
-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지자체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향후계획) 공모지침 배포('24.12월) ⇨ 공모접수('25.3월) ⇨ 서면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25.4월) ⇨ 대상지 10곳 최종 선정('25.5월)

참고 2 '25년 지역활력타운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 메뉴판

'24년도 메뉴판 연계 사업 (총 18개) → '25년도 메뉴판 연계 사업 (총 22개)

동사우선선정 8개

- ☐ 지역수요맞춤지원(국토부)
-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 ☐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교육부)
-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부)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복지부)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복지부)
- ☐ 노인일자리(복지부)
- ☐ 농촌아이돌봄지원(농림부)

핵심사업-동사우선선정 14개

- ☐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부)
-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 ☐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교육부)
-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부)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복지부)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복지부)
- ☐ 노인일자리(복지부)
- ☐ 일상돌봄 서비스(복지부)
- ☐ 사회서비스 취약지지원 사업(복지부)
- ☐ 농촌아이돌봄지원(농림부)
- ☐ 농촌돌봄농장(농림부)
- ☐ 어촌신활력증진(해수부)
-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해수부)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가점부여 10개

- ☐ 도시재생·우리동네살리기(국토부)
- ☐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행안부)
- ☐ 농촌돌봄농장(농림부)
- ☐ 어촌신활력증진(해수부)
-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해수부)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기부)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중기부)
- ☐ 로컬브랜드 창출(중기부)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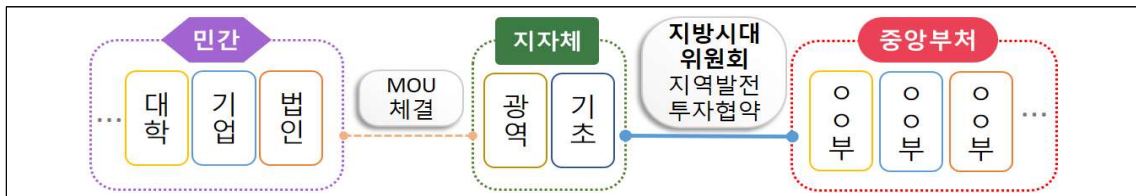
가점부여 8개

- ☐ 우리동네살리기(국토부)
- ☐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행안부)
- ☐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행안부)
- ☐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부)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기부)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중기부)
- ☐ 로컬브랜드 창출(중기부)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기부)

참고 3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대학·기업 등)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정책 추진
 - 민간의 창의성·전문성 등을 지역활성화에 연계하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권리·의무를 보장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 협력
- *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행·재정적 지원(국비 50억, 5:5 매칭), 지자체는 민간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민간은 지역활성화 사업에 참여

< 「민관상생 투자협약」 개념 >



- (추진경과) 인구감소지역 광역지자체 대상 9개 사업 대상지 선정('24.6)
 - * 강원 평창, 충북 단양, 충남 예산, 전북 장수, 전남 강진·진도, 경북 영양, 경남 의령, 부산 영도
- ('25년 추진방향) 민간 역할 강화 및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 상생사업을 추진, 신규사업 5개 선정('25.5)
 - * (공모대상)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참고4 참조)
 - (민간참여 확대)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중기중앙회 협조) 및 설명회 추진, 평가시 민간참여 항목 강화
 - (연계지원 확대) 민관상생 투자협약의 파급력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등 행·재정적 지원 연계 확대
 - *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계획 변경,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 연계 지원 강화
 - (민간주도력 제고)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지역상생에 극대화하기 위해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민간 주도 체계 확립
- (향후계획) 공모지침 배포('24.12월) ⇨ 공모접수('25.3월) ⇨ 사업평가('25.4월) ⇨ 대상지 5곳 최종 선정('24.5월초)

참고 4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대상지역

□ 사업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9곳(85개 기초)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주기) 5년 단위

구분	사업 대상지역(85개 기초) (인구감소지역중 수도권 제외)
부산	동구, 영도구, 서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
강원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경북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